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2005년 7월 27일(수)
오후 2시~4시
장소: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주최: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남측준비위원회 대전충남본부
주관: 7.27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심포지엄 추진위원회
후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협찬: KT KT 배재대학교



내 리 비 치

내 리 비 치	1
행 사 진 행 순 서	2
인 사 말	3
발 제 문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과 동북아 균형자 전략)	
(약) 6.15 공동위원회 결성선언문	46
(약) 6.15 공동위원회 결성 경과	48
(약) 6.15 공동위원회 대전충남본부 임원 및 집행부	50
(약) 6.15 공동위원회 대전충남본부 주요 행사 일정	53

※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남측준비위원회 대전충남본부
<(약) 6.15공동위원회 대전충남본부>

행 사 진 행 순 서

- 13:30 ~ 14:00 접수
- 1부 개회식
 - 14:00 ~ 14:30
 - 국민의례
 - 대표인사: 김용우 (약)6.15공동위원회 대전충남본부 상임대표
 - 축 사: 백낙청 (약)6.15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원회 상임대표
 - 내빈소개
 - 영상상영
 - 14:30 ~ 14:40 휴 식
- 2부 심포지엄
 - 14:40 ~ 15:00 주제발표
 - 강정구(동국대학교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과 동북아 균형자 전략
 - 15:00 ~ 15:40 지정토론
 - 토론자: 김학성(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 최교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 박성준(대전KBS 아나운서)
 -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 박종철(대전6.15청년회 회장)
 - 15:40 ~ 16:00 자유토론
- 부대행사: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사진전
 - ※ 문의: 정완숙(019-423-3301), 김수현(011-9068-3323)



인 사 글

7.27 정전협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대정신은 자유와 평등의 합리적 사회질서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적 가치가 언제부터인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이면에는 한 뿌리에서 갈라진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단 60년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의 정체성을 감금하고, 망령처럼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민족적 동질감보다 이질감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족의 명운을 스스로 개척하는데 실패했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강의 희생양으로 받쳐진 한반도의 역사는 서글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시련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역사의 담금질이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남과 북이 정치적 이념을 달리한 채 서로 다른 역사적 진로를 선택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계사적 소용돌이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망연한 심정을 가눌 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기로운 역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보다 더 냉철한 역사적 성찰 속에서 미래지향적 담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의 첫 단추가 분단의 극복과 민족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시각조정과 인식의 확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민족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보다는 대립과 배제의 역사적 어리석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을 넘어서는 새로



운 화해와 공존의 창조적 답론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가져왔던 힘의 논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하나의 틀 속으로 수렴하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중앙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분단논의가 지역의 시민사회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은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이고 일차원적 세계관이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남과 북은 그 벽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시민적 세계질서와 주체적 연결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심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대면하고자 하는 개인과 지역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한 이번 심포지움은 중앙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지역적 논의의 새로운 중심을 형성할 것이라 믿습니다.

2005. 7. 27

추진위원 김도형 김수현 박종철 송인용 정완숙

- 4 -



우리 민족끼리



인사글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면서

- 김용우(6·15공동위대전총남부상임대표)

한반도의 평화실현은 동북아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로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맞이하여 해방60년, 미군점령60년, 분단60년의 공간에 평화통일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늘 심포지움을 열게 됨은 뜻 깊은 일입니다. 지난1세기 100년은 한반도가 외세의 침탈로 시달렸던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한민족은 끈질긴 투쟁으로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에 힘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해방절은 외세들의 자리바꿈으로 미제국주의 점령60년의 폭력과 살상, 압제와 착취, 전쟁위기의 분단절이 되고 분단고착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6·15공동위를 건설하고 금년을 자주통일원년, 미군철수원년으로 삼아 진정한 의미의 해방과 자유를 쟁취하고자 여기까지 싸워 왔습니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분열에서 하나로 전쟁에서 평화로 나아갈 것이며 반전평화의 원칙으로 모든 외세들의 폭력과 압제를 벗어나 전쟁위기를 퇴치하고 평화적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외세공조로 분단이 최상의 이상향으로 생각한 모순을 극복하고 민족공조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애국의 길로 떨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원천적 거침돌인 미군을 확고히 철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단의 벽을 넘어가는 길목의 돌 뿌리인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철수하지 않는 한 한반도는 미제국주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분열과 갈등, 전쟁위기, 나아가 동북아의 반평화적 무력대치의 불안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강정구 교수와 여러 패널들의 고견을 통해 중부권의 자주평화통일의 운동이 한층 고창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민족끼리 손에 손잡고 분단의 벽을 넘어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결단의 시간되기를 희망합니다.

2005. 7. 27

- 5 -



우리 민족끼리



축사

- 구논희 (국회의원)

지난 2000년,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탄생했습니다. 그 후 남과 북의 교류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비롯해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사회·문화·체육 분야로부터 개성공단 착공과, 남북군사회담 등 경제·군사교류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얼마동안 미국의 잇따른 대북 강경발언으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경색국면에 빠져들어 가는 듯 했습니다만 노무현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방북했던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위원장과의 면담은 살얼음판 같았던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단번에 완화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면담 시 핵 포기의 대가로 약속했던 대북전력공급을 두고 여전히 퍼주기라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집니다. 하지만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생존과 장래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단된 조국'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조국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반도, 역동적인 조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 토대가 바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입니다.

대북전력공급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6·15정신의 기본정신 위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 6 -



우리 민족끼리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영 장관 방북 이후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는 바로 그 결실로서 10월 경의선 개통식, 경협사무소 개성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 등 구체적이고도 매우 뜻 깊은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이어 오는 대북정책과 통일 기조를 계승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차원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평화와 통일이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 또한 보태져야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중입니다.

정전협정 52주년을 낮아 열린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속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하나씩 안고 갔으면 합니다. 거창할 이유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작은 일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소리 없이 다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신 6·15공동선언실천남북공동행사남측준비위 대전총남본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정구 교수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각계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은 이미 와 있습니다.

- 7 -



우리 민족끼리



축 사

- 권선택 (국회의원)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위험을 관리하는 유일한 장치이며 또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허물어져가는 협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뀌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난 52년 동안의 남과 북은 서로간의 불신과 대립을 넘어 이제는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통일의 주체로 서 있습니다.

최근 북핵문제를 통해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한반도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의 물꼬를 트기위한 많은 진전된 노력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성과가 가능한 것도 변화된 남과 북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는 26일 6자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북한의 핵폐기 시에는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송전하겠다는 중대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과 개성의 관광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인 올해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관광이 열리는 것은 그 감회가 새로운 일입니다.

이렇듯 한반도의 정세는 지금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6자회담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고 우리의 여러 제안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종전협정의 규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 정부당국과 민간단체를 막론하고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 향후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통일이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크게는 6자회담의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결실을 맺어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기초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행사를 주관하신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대전충남본부의 헌신적 활동으로 이러한 희망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통일을 이루는 길에서 커다란 하나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27일



축 사

- 선병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출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선병렬입니다. 먼저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이영복 상임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대전충남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광복 60주년과 6.15남북 정상회담 5주년이 되는 2005년은 우리에게 남북발전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역사적 무게가 더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 다행스럽게 교착상태에 있던 6자회담이 7월26일 시작되면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 백두산과 개성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등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발전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이후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남과 북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일체의 민간교류를 제한하고 권력자들간 적대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며 남북관계를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서서히 변화하던 남북관계는 지난 2000년 6월15일 남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냄으로써 광복 이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고, 개성에서는 북한의 노동자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made in korea의 이름으로 시장에 나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북에서 화상으로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좋은 남북관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제정세나, 남북 당국간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좌지우지되던 민간의 교류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좋은 의견들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위원회 대전충남본부 이영복 상임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 자리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이 남북관계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발 제 문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과 동북아균형자전략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강정구
unikorea@cvnet.co.kr

1. 머리말

2. 한반도 전쟁위기의 어제와 오늘

- 1) 탈 이데올로기적 전쟁위기 분석
- 2) 미·소냉전기 세 번의 전쟁위기
- 3) 탈 냉전기 여덟 번의 전쟁위기
- 4) 미국의 대북 침략전쟁연습
- 5) 미국주도 전쟁위기의 특징
- 6) 북한주도 전쟁위기의 허구성

3. 2003-05 현존 전쟁위기의 실재

- 1) '북핵위기' 원인제공자는 미국
- 2) 시간끌기와 명분 쌓기의 6자회담
- 3) 미국의 고강도전쟁 준비현황
- 4) 지강도전쟁 현황

4. '침략역외동맹'으로 변화 꾀하는 '미대한미동맹'과 동북아질서

5. '제2의 청일전쟁' 위기 대응의 반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균형자전략

6. 동북아균형자전략에 의한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 모색

7. 평화보장체제를 향한 장기구조사적 과제

8. 맺음말

- 12 -



우리 민족끼리



1. 머리말*1)

올해는 해방 60년이면서 분단 60년이다. 동시에 한미동맹 60년이고 외국군인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지도 60년 완갑이 되는 해이다. 인생에서 완갑은 이제까지의 자기 일생을 성찰한 바탕위에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제2의 인생' 또는 '제2의 태어남'을 의미한다. 이 제2의 인생은 세계사적으로는 탈냉전시대, 민족사적으로는 통일시대라는 역사흐름에 순응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획기적으로 열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과거의 냉전분단체제의 극복을 수반하는 과제를 지고 있다.

또한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 된지 52년을 맞는 날이다. 처음부터 북측과 중국은 전쟁종식, 외국군 철수, 평화실현, 통일 등 정치·군사 협정 중심의 포괄협정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를 철저히 군사적 성격에 국한시키는 성격으로 일관했다. 이 결과 전쟁상태는 지속시키면서 단순한 무력적대행위를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휴전에 불과한 협정이 되고 말았다. 물론 남측 이승만 정부는 아예 정전 자체를 거부해 협정당사자에서 배제됐다. 이 불완전한 정전협정을 완전한 평화체제를 위한 협정으로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제4조 60항은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코리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코리아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당사자인 미국이 협정에서 규정한 정치협상을 지속적으로 거절해 전쟁종식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왔다. 1954년 제네바협상에서 한반도문제를 논의하고 정치협상을 시작했으나 미국은 고의적으로 철수해 이를 무산시켰다. 이후 북측은 연례행사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해 왔으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거절해 한반도에는 끊임없는 전쟁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국 한반도에는 탈냉전과 평화통일은커녕 전쟁위기의 연속이고, 지금도 '6월 위기설'이 파다하다. 남북 간에는 적대적 분단체제가 외양적으로는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내부 깊숙이 분단적대체제가 구조화 된 채 남아 있다.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의 분단체제는 두드러지게 '속 냉전'을 띄고 있다. 북·미간에는 '탈냉전'이 아니라 오히려 '극 냉전'과 열전의 위험 속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보통국가화'와 '아류패권주의'로 달리면서 동북아에 영토분쟁과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다. 미국은 아태주둔 미군의 재편과 재배치, 신군사전략을 추진해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동북아 신냉전패권'으로 나아가면서 동북아 신냉전구도를 서서히 굳히고 있다. 중국은 대만사태에 대비한 '반국가분열법'으로 미일의 기선에 대응하면서 '탈 봉쇄' 구도를 구축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러시아 또한 이제까지의 무력감에서 벗어나 군사강대국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동북아질서구도에서 자기의 몫 쟁기에 나서고 있다. 그야말로 동북

1) 이 글은 615청학연대 주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누구와 공조할 것인가' 토론회(05년 5월11일 서강대)에서 발표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 13 -



우리 민족끼리



아가 새판짜기에 접어든 셈이다.

이 새판짜기에서 미국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방어역내군사동맹'을 '침략역외군사동맹'으로 변환시키고, 미군기지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해 방어가지에서 침략지기로 전환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라는 기존의 역할에서 주로 중국을 겨냥해 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새판짜기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 갈림길 또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 결정적 시기에 잘 못된 역사행로를 일단 택하게 되면 앞으로 몇 십 년 또는 백년 이상 민족사 행로가 고착화되는 운명의 역사 갈림길이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모두는 과거의 파행적 역사전환기였던 1860-90년대의 '반침략반봉건시대', '해방공간시대'의 전철을 밟지 말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 및 통일의 행로를 열어나아가 할 것이다.

이 글도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한반도와 동북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한반도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제까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결과물인 냉전성역이라는 맹목적 믿음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기반해 평가검증분석하는 과학적 접근을 취할 것이다.

먼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의 현황을 구체적 사실에 의해 점검함으로써 평화과제의 전쟁주범을 가려내도록 하겠다. 역시 2002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햇충형봉쇄'와 김진표 발언 파문 등으로 나타난 2003년 '3월 위기설', 페리 전국방장관 등의 경고로 나타난 '8-9월 위기설' 2004년 미 대통령선거 직전의 '9-10월 위기설', '데드라인 설정의 6월 위기설' 등으로 이어지는 현존 전쟁위기와 대만사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제2의 청일전쟁위기'를 점검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과제법의 진상에 접근하겠다. 이어 동북아에 서서히 구축되고 있는 미일의 동북아신냉전패권주의, 아류패권주의, 이에 따른 동북아신냉전구도를 가능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불허문제와 '동북아균형자전략'을 평가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민족평화보장체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2. 한반도 전쟁위기의 어제와 오늘

1) 탈 이데올로기적 전쟁위기 분석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반공·반북이데올로기라는 '병'에 걸려 전쟁위기 이야기만 나오면 으레 그것은 북한 때문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어 왔다. 주위에서 누가 이를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곧장 그를 멀리하고 몸을 도사리기까지 했다. 혹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만으로도 인혁당처럼 개죽음이나 물고기를 당할지 모르는 공포감에서다.

그런데 부시가 대통령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스럽고 당연한' 맹목적 믿음에

- 14 -



우리 민족끼리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진행되고 평화기운이 감돌았지만 부시는 대통령이 되자 말자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고 핵위기, 곧 전쟁위기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아심은 미국이 겉으로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지만 속으로는 허위정보를 조작해서 대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을 자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다. 곧 맹목적 믿음인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허물어지고 있다.

2003년 7월 24일 KBS 여론조사는 61%의 응답자들이 한반도의 전쟁 요인으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택했다. '민중의소리'와 씨렌서치가 2004년 광복절을 맞아 실시한 정기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9%가 민족공조를 선택한 반면, 한·미동맹을 선택한 유권자는 25.8%에 그쳤다. 또 2004년 6월 6일 전국의 초·중·고생 4000명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청소년 호국보훈 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친근한 국가로 북한(26.4%)이 미국(17.8%)을 앞섰다.

2005년 4월 9일 인터넷 언론 '프린터 타임스'와 '21세기 리서치'가 전국에 걸친 성인 1058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1%가 북핵 보유가 통일한국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미국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용 '43.8%', '공격용' 31.1%로 봤다. 또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미국이 29.5%로 1위, 일본이 29.2%로 2위, 북한(18.4%)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45.7%, 그리고 학생응답자의 50.1%가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고 있다"(<통일뉴스>05-04-12 오후 7:29:16).

지난 2004년 6월 30일 대전평화통일포럼 창립 학술심포지엄에서 연세대 고상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리서치&리서치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한국사회가 이념적으로 상당히 유연해졌으며 상당수 국민이 행렬인 미국을 제1의 주적국가로 간주할 만큼 반미 성향은 크게 증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나라의 주적국가가 어디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리서치&리서치, 2004년)에서 20-40대는 미국(20대 57.9%, 30대 46.8%, 40대 36.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50대 이상만 북한(52.2%)을 주적국가로 지목했다(<연합뉴스> 2004.06.30).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www.ksoi.org)와 문화일보가 지난 5월 10일 전국 성인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이 47.6%로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31.2%보다 높게 나왔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이 연구소의 자체자료는 아래와 같이 특성화 하고 있다.

- 1> 지역,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북한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2> '북한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 호남권, 20대와 30대, 대졸이상 고학력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 특히 높았음

- 15 -



우리 민족끼리



- 3> 반면,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은 충청권과 TK지역, 남성, 50대 이상, 농림 어업, 자영업,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4> 지지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한나라당 지지층 순으로 '북한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보수적 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미국 보다는 북한 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임

이러한 여론조사는 단적으로 한반도 평화과괴범, 곧 전쟁주범은 바로 부시 미국대통령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일반 여론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있다. 여전히 한반도 전쟁 위협은 북한에서 오고 그 주범은 김정일이라는 목소리다. 3·1절이나 8·15광복절에 흔히들 반핵·반김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시청 앞에 모여든 집단들이다. 이들은 태극기보다 미국의 성조기를 더 소중히 손에 들고, 우리 대통령이 아닌 미국대통령 부시의 사진을 요란스럽게 흔들면서 김정일 화형식 등의 소동을 펼치는 집단들이다. 여기에는 주로 과거 독재시절 군대나 경찰과 같은 국가폭력기구에서 잔뼈가 굵었다 퇴역한 군인과 경찰, 극우기독교 목사나 광신자, 한 때 운동권에 있다 변신한 김문수 같은 소영웅주의자, 조갑제나 한승조 같은 골수 친미·친일·반북 '지도자', 일부 골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다. 이들에게서 필자는 조선조 말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송병준이 이끄는 보부상 중심의 일진회라는 친일민족반역 단체를 연상하게 된다.

또 다른 집단이 있다. 이들은 위의 부류와 진배없지만 겉으로는 세련되게 한미동맹만 강조하는 집단들이다. 언제나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나 '한미동맹의 기초 하에서'를 밥 먹듯이 외치는 한나라당, 국방부와 외교부 고위관료, 조·중·동 등 주류 중이신문, 열린우리당, 주류지식인, 외교안보 고위관료 등의 상층부에 포진해 있다. 사대주의라는 말이 이들에게는 걸맞지 않다. 이들은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자'들이다.

이들 중 많은 수는 일제 식민통치기서부터 '대일 노예주의'로 출발해 해방 후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로 대통령 해 약 100년 가까이 노예 짓 해왔다. 이리다 보니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파능이 절타하는, '식민화 된 무의식'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 결과 2005년 4월 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상당히 유식한 한국 국민인데, 말하는 걸 보면 미국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게 내게는 제일 힘든다"는 노대통령의 속앓이병 토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전형적인 보기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의 한국 측 대표인 외교·국방 관료들이다. 이들은 협상도 하기 전에 협상원칙을 '기치 이전비용은 전액 한국이 부담'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의 개입은 최소화 시킨다"로 삼았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여기는 사



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데도 외교부 수장인 반기문은 "외교부 내에 친미파는 없다"는 낯두리를 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정상적 사람인지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과괴범과 전쟁주범에 대한 이런 혼란된 인식이운데 어느 집단이 과연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가려야 한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인 전쟁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목소리 크기나, 광신자의 맹목적 믿음이나, 60년 동안 우리먹은 반공이데올로기 등으로 진실이 판명될 수 없다. 오직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확인을 그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만 진실은 밝혀질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쟁위기의 실재를 짚어보면서 누가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인지를 가려 보겠다.

2) 미·소 냉전기 세 번의 전쟁위기

1953년 7월 정전이후 1989년 탈냉전까지 한반도에는 세 번의 전쟁위기가 있었다. 1968년 미국의 간첩선이 북한영해를 침범해 나포되었던 푸에블로사건, 1969년 미국의 스파이비행기인 EC-121정찰기 격추사건,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이 그것이다. 이 세 사건 당시 핵전쟁의 전운이 감돌아 민족생존권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 특히 미루나무사건의 경우 판도에서 핵무기를 장착한 B-52폭격기가 비무장 지대로 비행하다 마지막 순간에 기수를 돌리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다.

판문점 사건 당시를 보면 우리 민족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최대의 전쟁위기를 맞았으면서도 한국은 철저히 배제되고 전쟁을 일으키려한 장본인은 미국이지 북한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판문점 사건 사흘 뒤인 8월21일 오전 7시, 미루나무 절단작전을 전개하면서 미군은.. 미드웨이 함모 발진, F-111전투기와 B-52폭격기 비행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사 시위를 벌였다.....사흘 간 한국의 자리는 없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역할을 풀 반면 작전 때... 한국군 태권도유단자 병력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모든 것은 스틸웰과 워싱턴. 모든 것이 미국의 몫이었다(한국안보문서ksa1-004)..

흔히들 북한이 전쟁발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시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푸에블로사건과 EC-121기 정찰기 사건의 경우 주권국가로서 북한이 영해와 영공을 침범한 죄를 나포, 격추시키는 것은 당연한 국제법상의 권리다. 주권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위를 침략전쟁으로 대처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68년의 경우 미국은 결국 북측에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

76년 미루나무사건의 경우 북한과 미국 양측의 잘못을 명백히 가리기는 힘들지만 설



사 북한이 잘못해 미국 사람 둘이 살해했다하더라도 이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정당화 되면 지금 200여 나라가 있는 지구에는 하루라도 전쟁이 터지지 않은 날이 없게 될 것이다. 합법적 방안은 옹당 보상이나 사회, 재발방지 등의 비전쟁의 방식이어야 한다.

이처럼 미국 때문에 냉전이 한반도는 세 번의 전쟁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주도 전쟁위기의 진실은 가려진 채 모두 북한 때문인 것으로 잘못 알고 또 믿고 있다. 맹목적인 반공이데올로기와 북한에 대한 냉전적대 때문에 거 것이 진실을 가린 것이다.

이 밖에 1968년 북한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한 1·21사건은 위험한 북한의 도발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실제 한반도 전쟁위기는 없었다. 왜냐하면 한반도 전쟁 결정은 미국의 고유권한이지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남한 몫이 아니었기 때문이다.2) 당시 미국은 1·21사태를 전쟁을 치를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3) 탈 냉전기 여덟 번의 전쟁위기

1989년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해체되면서 우리 한반도도 이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평화권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오히려 전쟁위기가 더욱 빈번해지고 아슬아슬한 국면으로 치달아 무려 여덟 번의 전쟁위기가 있었고 마지막 전쟁위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1999년 5월 24일 <한겨레>와 대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 전쟁 일보직전 상황을 회고하면서 "하루는 보고를 받으니 내일.....대사관 직원 가족들의 철수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전쟁 직전에 취하는 조치다.....남북에서.....천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그 날 저녁 클린턴하고 32분 동안 통화했는데 대만 싸웠

2) 이럴때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군부 고위관료 가운데 국가 주권의 상징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군사적 노예국가인 상태를 해소하는 작전권 환수에 대해 이들 대부분은 시기상조론과 불감당론을 주장하는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있다면서 주권상실에 반론을 펼치고 있지만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구조상 평시에 한국의 대통령이 전쟁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 양측이 참칭하고, 이 내용을 한미연합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이 겸직)이 받아서 작전권을 행사한다. NCMA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은 미군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쌍방 타협이라기보다는 통보 받고 알 수 있을 뿐이다(한국군이 독자적인 전략개념을 내세워 작전권을 행사한 적은 60년대 베트남전쟁 파병당시 외에는 없다). 또한 여기에서 결정된 작전계획이나 한미공동군사훈련 등은 한국의 대통령이 할지라도 중단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사실상 평시에도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NCMA는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포함해 우리 합참의장과 합참 전략기획위원장이 참석하고 한미 동수(同數)로 구성된다 미군 측이 담당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추가해 구조적으로 미국 측 계획대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세훈, "전시작전통제권과 한국군의 현실적 문제 및 국제 평화 네트워크 주역, '한미연합방위체제와 MD,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 발표문, 2003년 7월 10일 국가안전위원회 배움터



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전쟁에서 남과 북은 운명공동체라는 것과, 또 전쟁국면에 들어간 우리와 생존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마저도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기막힌 실상을 말해준다.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전쟁프로그램을 그대로 추진했다. 2001년 6월 제주도 평화포럼에 참석한 당시 국방장관인턴 페리는 이 사실을 확인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하겠지만 한국군, 미군, 한국 국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주한미군을 수 만 명 증원하는 계획을 입안했고, 주한 미대사관에 민간인 철수계획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는.....김일성의 전언을 받아 협상에 나선 것이다"(<중앙일보>01.06.17).

이런 전쟁위기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89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여덟 번 있었다. 곧, 19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와 이종구 국방장관의 '엔데배작전' 언급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1994년 6월 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해위기, 영터리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 짓고 모의 핵폭탄 BDU-38로 핵전쟁 실천연습까지 벌였던 98-99년 금강리해위기, 98년 여름 대포동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발발한 98-99년의 미사일위기, 휴전 이후 최초의 정규군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99년의 1차 서해교전, 2002년 부시의 '악의 축' 전쟁위협, 2002년 2차 서해교전, 또 2003-05년 현재의 한반도전쟁위기 등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전쟁을 주도한 것은 서해교전을 빼고 여섯 번이나 된다. 남북 주도는 서해교전으로 각기 한 번이다. 이는 북한이 전쟁위기와 평화권 파괴의 주범이라는 기존의 북한 전쟁위협론은 허구이고, 오히려 미국과 주한미군이 한반도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주범이라는 미국 전쟁위협론이 진실임을 과학적으로 말해준다.

4) 미국의 대북 침략전쟁연습

미국은 이 같이 전쟁위기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대북한 침략전쟁연습인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합동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비롯해서 1976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면서 대북핵공격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이 94년 북미제제비합의 때까지 지속되었다. 팀스피리트훈련이 중단되자 이 대신 1995년부터 대북한침공 실천연습훈련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이 연례적으로 실시되





다가 2003년부터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을 통합해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제2의 틴스퍼리트훈련이다. 여기에는 미 태평양군사령부, 주일미군이 참여하고 전쟁발발 초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과 동일한 수준의 대규모 훈련으로 북한섬멸전의 실천훈련을 전개한다.

이 통합훈련은 첨예화되고 있는 북-미 대결 시점에서 전쟁으로 치달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고, 한반도가 미국의 가장 큰 전쟁실형장이 되고, 한국군을 예측시켜 민족적대와 상전을 부추기고, 우리의 땅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연합훈련비까지 우리가 분담해 미국 퍼주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2003년 3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통합훈련에는 이라크전쟁 수준에 준하는 20만의 병력투입, 75대의 전투기와 전폭기,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칼빈슨 핵 함모와 전투기 F-15E 1개 대대, 6대의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가솔한 무력이 동원됐다. 김정일 정권의 전복, 북한군 케벌, 평양 장악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2에 따라 훈련된 것으로 1993년 틴스퍼리트훈련 이래 최대 규모였다. 또 1993년 틴스퍼리트훈련 이래 10년 만에 F-117 스텔스 전폭기를 투입해 정밀타격능력 위주로 훈련을 실시해 전쟁공포감을 불러왔다.

이러 8월에는 연례적인 울지포커스스즈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는 예년과 달리 2003년 훈련은 경상남도의 경우 전 지역에 걸쳐 대 침투 및 국지도발, 전시전환, 전시상황 아래 상황조치 훈련과 신작전계획 검증 등 민-관군 통합방위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주야간에 실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실전연습을 했다.

이 밖에도 오키나와 주둔 병력을 한반도에 신속 배치하는 훈련을 진행했으며 미 해병 신속기동군 500여명을 고속정으로 22시간 내 경북 포항에 도착시켰다. 이는 미 제3해병원정대 '신속대응군' 한반도 해상배치와 레를 같이하는 것이며 전쟁준비는 다방면에서 면밀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대북한 침략전쟁 연습은 2004년 초부터 더 기승을 부렸다. 3월 초 사상 최초로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북한과 인접한 평택에서 '프리덤 배너 04'라는 해병대 훈련을 가졌다. 미 해병대 8,000여명이 참가한 이 훈련은 미 해병 제3인원정군 병력이 특정 지역에서 10일 이내에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약 1만7,000명의 해병대가 한 달 정도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무기와 장비를 사전에 배치하는 훈련이다. 이로써 미국은 불과 20시간 이내에 406개가 넘는 차량과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북한 가까이 배치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의 전쟁연습은 더욱 기승을 부려 2004년 미국대통령선거에 즈음해 한반도 10월 위기설이 파다했다. 미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F-117 전폭기 14대가 한국에 배치돼 '작전계획 속지 훈련'을 벌이고, 이어 스트라이크 이글 F-15E 전폭기 대대가 이미 광주공항에 배치되어 3개월 이상 선제공격 훈련을 해왔다. 2004년 8월17일자 성조지에



따르면 주한미군 소속 수천 명의 한국인 노무단 동원훈련이 실시됐다. 동해에는 북을 겨냥한 주한미군 전체의 화력을 가진 스텔스 항공모함과 MD의 이지스함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다.

또 작전계획 5027은 대북 선제 핵 공격 위협 및 체제 전복을, 5026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공격을, 5028은 우발적인 사태 대비를, 5029는 북한 정권붕괴나 혼란사태 시 난민구제 및 수용 등에 대비를, 5030은 군사긴장을 지속적으로 도발해 북한 군사정체력을 소진시켜 장기적으로 내부적 케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북침공에 대한 미국의 끈질긴 집착은 최근 밝혀진 5029-05 시도와 한국 제동에서 잘 나타난다. 작계 5029는 북한에서 내부소요, 정권붕괴, 대규모 탈북사태, 쿠데타, 민중봉기 등 여러 상황에 대응한 단계별 세부 군사조치 기획으로 전쟁 유도책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이 작전권을 발동할 수 있는 '테트론(방어준비태세) 3'을 발동해 평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넘겨 미국이 전쟁도발을 임의적으로 할 가능성 열어 놓는 것으로 한미연합사가 2004년 12월 추진했으나 한국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됐다. 5029-05 시안은 미국 자의에 의한 전쟁유발, 정부의 비밀계획과 배치, 북정권 붕괴 시 625와 같이 미국의 북한 관할권 장악으로 주권상실과 통일 걸림돌 등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원천 봉쇄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한반도 전쟁위기 확충은 외세인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³⁾

5) 미국주도 평화위기의 특징

이제까지 실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주도 전쟁위기 확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우리는 아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전쟁위기는 한국전쟁 정전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둘째, 전쟁위기의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는 냉전기의 전쟁위기 세 번, 탈냉전기의 전쟁위기 여덟 번, 총 11번 가운데 1차 서해교전은 남한이 전쟁위기를 주도했고, 2차 서해교전은 북한이 주도했고, 나머지 아홉 번은 모두 미국이 주도했다. 미국의 전쟁주도 확률은 9/11로서 82%이지만 북한주도 확률은 1/11로서 9%에 불과하다. 더구나 서해교전은 우발적 충돌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쟁위기는 모두 아홉 번을 미국이 주도해 그 확률은 100%다. 이렇듯 우리는 이제까지의 기성 한국사회 주류와 미국에 의해 한반도 전쟁위기 주

3) 이런 의외요인에 의한 전쟁위기 방어도 남북 사이의 내적 적대나 꽃게잡이 같은 사소한 우발적 사건을 계기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 전형적인 보기가 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과 2004년 7월14일 발생한 북방한계선(NLL)위선 사건이다. 실제 1-2차 서해교전에서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놓였으나 남북이 각각 자체력을 발휘해 비극적인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았다. 이러한 우발적 전쟁위기는 615공동선언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기에 본질적인 전쟁위기는 아니다.



범은 으레 북한인 것으로 강요당해 왔다.

셋째, 냉전시대로부터 탈냉전시대로 전쟁위기가 더 높다. 냉전시대는 세 번의 전쟁위기가 있었지만 탈냉전시기는 무려 여덟 번의 전쟁위기가 있었다. 이는 소련의 몰락으로 미국에 대한 견제력이 상실돼 전쟁억제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이 모르는 사이 미국은 전쟁비밀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1998년 금강리 핵위기 당시 미국은 BDU 38이라는 모의핵폭탄실험을 하면서도 사전에 한국정부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2002년 약의 축 전쟁위기 당시도 미국은 한국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비밀전쟁 계획을 세우다 중단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는 신속한 선제공격을 강조한 부시독트린에 따른 5027-02가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서도 재확인된다.

다섯째, 94년 6월 같이 전쟁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한국의 대통령도 전쟁을 막지 못하게 된다. 2004년 11월12일 노 대통령은 LA에서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 외의 방법이 없다"면서 무력행사에 전쟁, 봉쇄나 북한붕괴 시도 등이 절대 불가함을 미국을 겨냥해 단호히 천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과격으로 치달아 한국이 속수무책이 되는 상황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여섯째, 미국주도의 전쟁위기는 핵전쟁까지도 상정하고 있다.

일곱째, 남북주도의 전쟁위기는 우발적 충돌에서 비롯됐으나 미국주도의 전쟁위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⁴⁾

여덟째, 앞에서 확인했지만 미국은 말로만 평화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인 평화협정이나 불가침협정 체결을 거절하고, 대북한 침략전쟁연습인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2003년부터 그 정도를 넘어서 언제든 침략전쟁을 감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보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임이 명확히 입증된다. 그러나 밖으로는

4) 2002년의 2차 서해교전에 대해 국방부는 7월 7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집결식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군의 악의적인 선제 기습"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인보가(2003년 5월28일) 확인한 것은 "한국 및 한미연합사 정보 관계자는 교전 다음 날인 6월30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갖고 서해교전을 '북한의 계획된, 의도적 공격'이라기 보다는 상호 근접해 기동하다 발생한 99년 연평해전과 유사하게 이군 고수정이 충돌공격을 감행하려 한 데 대해 위협을 느껴 선제공격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다. "이 문건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 북한 경비정과 황해도 등산곶에 위치한 북한 해군 8전대사령부간, 또 정박 중인 군인 대기와 북한 지휘부의 통신 내용 등 중요 첩보(SD)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 해군 2함대의 목인 하에 어뢰지진선 밖으로까지 진출해 꽃게잡이 조업을 한 우리 어선들의 움직임을 교전을 유발한 한 원인이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당시 북의 우발적 공격에 대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햇볕정책으로 대북경계태세가 이완돼 있던 탓에 패전했을 것'이라는 야당 등의 공세를 우려한 평화대의 완만과 해군작전을 취소화하려는 작전지휘관간의 이해가 맞물려 사태를 왜곡한 것"이고 "교전 이후 북한 해군사령부가 8전대에 현지 감찰을 나와 교전을 막지 못한 북한 등산곶 경비정 함장 등 지휘관들을 줄줄이 문책한 사실도 우발적 사태임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또 안으로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기성 주류세력이 이를 왜곡하여 정작 전쟁위기 주도의 실체이고 주범인 미국에 면죄부를 안겨왔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북한 전쟁위험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6) 북한주도 전쟁위기론의 허구성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북한주도 전쟁위기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이제 이 북한주도 전쟁위기론의 허구성을 밝히겠다.

첫째, 이미 확인한 것처럼 정전협정 이후 11번의 전쟁위기 가운데 미국이 주도한 것은 서해교전을 뺀 아홉 번으로 그 확률은 9/11이다. 남북은 각기 1/11로서 북한이 주도했다는 것은 허구임이 곧바로 드러난다.

둘째, 북한주도 전쟁위기의 허구성은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에 대한 북-미간의 공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은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인 평화협정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최소요구인 불가침조약이나 협정마저도 계속 거절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핵태세보고서(NPR), '약의 축', 부시독트린, 5027-02/04, 정밀타격의 5026, 대북 고사전략인 5030 등에서 대북 침략작전과 고사작전인 저장도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또 핵선제공격까지 명시하고 있다.

셋째,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대북한 침략전쟁 연습을 강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3월 8일 미 상원군사위 2006년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라프트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공군 조종사들은 매년 12-15시간 정도 항공기가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수준에서 비행훈련을 하기 때문에 군사준비 태세로는 부족하며, 지상군은 여단규모 기동훈련이 매우 드물 정도로 대규모 기동훈련은 줄어든 채 사단급 이상은 주로 지휘소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수년간 변함 없으며, 물자 부족 때문에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한국 공군과 주한미공군은 한 달에 15시간 비행훈련을 한다고 그는 밝혔다.

넷째, 남한군사력 단독으로도 대북한 과잉 역지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무력도 발은 그들에게는 자살행위다. 이는 북한주도 전쟁위기론이 성립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북한 군사비는 17억 달러 수준이지만 남한은 무려 200억 달러로 북한의 10배가 넘는다. 전쟁능력은 경제력에 비례하는데 2004년 6월 8일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북한 전체 GNI가 2003년 184억 달러로 남한의 6,061억 달러에





비해 1/33에 지나지 않는다. 예산 또한 100억 달러 안팎 수준이다. 대외무역은 23억9천만 달러로 남한의 156분의 1(0.6%)에 불과하다.

북한 전체 경제규모가 200억 달러 미만으로 남한 군사비와 비슷하고 북한 전체 예산이 100억 달러 미만으로 남한군사비의 2분의 1 수준이다. 다른 온갖 이야기들 덕분에 필요도 없다. 이는 미국 국방장관도 남한군이 북한군에 대처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역군의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군이 한반도문제를 전담하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데서도 증명된다.

북한의 군사력 열세는 남한군부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99년 육군본부가 만든 '정종교제'에서는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동아일보》1999. 4. 25). 첫째와 셋째만 들면, 북한군은 만성적 영양실조상태이며 체격도 매우 작다는 것이다. "국군은 평균신장 171cm에 체중 66kg, 북한군은 162cm에 47~49kg 수준으로 이는 북성 웰터급과 플라이급 선수의 차이에 해당한다." 셋째,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는 것이다.

또한 립스펠트 미국방장관은 2003년 3월 16일 국방부에서 군부 인사들과의 정례 회담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병력을 매우 앞쪽에 배치해두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북한의 25~35배에 이른다. 필요한 만큼의 역지력을 부담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고 있다"(《한겨레》03.3.16)고 밝혔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 연구원 립스(L. Liksch)는 2000년 1월 '자유아시아방송' 대담에서, "지난 5년간 북한은 채택식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남침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북한주도 전쟁위기는 성립될 수 없음이 입증된 셈이다.

다섯째, 6·15공동선언 등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이 고조되고 남북 간 군사간장은 저하되어 북한은 전쟁위기를 일으킬 역량도 없거나 의도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북한주도 전쟁위기는 성립될 수 없고, 오히려 한반도 전쟁위기는 '동맹'이라는 미국과 주한미군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런데도 우리는 허구적인 '북한겨냥 미국의존 안보체제'에 매몰되어 진정 추구해야 하는 '미국겨냥 민족·동북아시아의존 안보체제'를 방기한 채 연속적인 전쟁위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3. 2003-05 현존 전쟁위기의 실체

앞 절에서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임이 입증되었다. 이제 우리의 당면 현안인 현존 한반도 전쟁위기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북핵위기' 원인제공자는 미국

현존 북핵위기는 미국이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시인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결코 시인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아직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⁵⁾ 그러면서도 제네바협정의 하나인 대북 중유공급을 끊으면서 사태를 폭발시켜 결국 제네바합의라는 귀중한 한반도 평화보장책을 중단시키고 말았다.

흔히들 북한이 제네바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북핵위기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제네바협정에서 북한이 핵동결을 하는 반대급부로 제공해 된 다섯 가지 협약사항 중 유일하게 제대로 지킨 것이라곤 중유 제공 50만 톤밖에 없다. 대조적으로 북한은 미국무성과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수석 및 우리 통일부의 말대로 핵동결을 차질 없이 이행해 왔다. 곧 협정 이행율은 북한 90%이상, 미국 23% 수준이다.⁶⁾

5)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제조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조작과 거짓으로 침철된 미국의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기정사실화 할 수 없다. 핵공학 전문가 강정민에 의하면 허로시마급 원자폭탄을 위해서는 고농축우라늄 25kg이 필요하고, 원심분리기 850개를 1년간 가동해야 하고, 핵폭탄 2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심분리기 1,700개가 필요하다. 원심분리기는 전력소비가 적고 모든 원심분리기를 한 군데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 음매가 쉽고 고농축우라늄 생산과정에서 극히 미약한 방사능을 방출한다. 반경수 1m 범위로 농축과정에서 누출되는 미량의 우라늄 분진을 환경시료 채취해 분석과 검증을 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군사시설까지도 사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은 편한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없이 김정일 정권이 모든 시설을 미국이 사찰하도록 허용할 리 없다. 원심분리기는 성능 좋은 모터와 전자제어 장치 필요하나 이에 못 미치는 미그기 엔진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기술수준으로 북한이 고강도 알루미늄과 설계도만 있다고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는 없다. 더구나 2002년 10월 켈리특사에 북한이 인정했다 하나 전혀 사실 아님이 판명됐고, 북한이 알루미늄관 등을 수입한 결정적 증거 없이 수입여부가 불확실하고, 수입했다더라도 탄피 등 다용도이기에 HEU 보유근거가 될 수 없다. 미국은 원심분리기 원형과 설계도를 제공했다는 파키스탄 칸 박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리비아에 6불우라늄(UF6)을 수출했다는 혐의 역시 미국이 고의로 정보조작된 것으로 <와싱턴 포스트>가 폭로했다. CIA 02년 11월 미 의회 전달메모는 "우리는 최근까지 북한이 원심분리기 시설(농축시설) 건설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렇지만 남한이 향후 핵연료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해 R&D 수준에서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듯이, 북한이 향후 경수로에 사용될 핵연료를 마련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핵무기 제조용이 아니다.

6) 미국은 협정 의무사항 5개 가운데 제결정후부터 협정을 제대로 이행한 것은 중유 50만 톤 지원 밖에 없다. 제네바 협정의 소극적 안전보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정직후부터 여전히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협정직후부터 일본이 요구했기에 수용했다고 확인됐다. 미국은 아직도 많은 북한의 금강리핵위기를 조작해 BDU-38 모의핵폭탄투하 연습까지 했고, 작전계획 5027-98로 북한군은 썩어서 말라버리겠다고 위협해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됐고, 사찰 후 사실무근이 확인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황야의 무법자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원자력 시설을 모두 동결하고 핵사찰을 받았다. 단지 이미 미국이 심대하게 위배해 협정을 제대로 이행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시점인 97년부터 북은 고농축우라늄 70% 정도 재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네바협정은 쌍무협정이기 때문에 미국 위배가 확인된 이상 북한이 이를 고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핵시설 동결을 지속해 협정을 지켰다. 고농축우라늄 자체가 그렇게 중대한 협정위배라면 왜 당시 미국은 이를



미국은 클린턴 정권 하에서도 제네바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금강리핵위기나 99년 미사일위기로 전쟁위협을 자행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1999년 미사일 전쟁위기를 계기로 클린턴 정부 말기에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와 10·12공동성명을 통해서 북미간의 완전한 외교관계의 수립과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는 55년 만에 평화가 정착하는 듯 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 부시정부는 9·11이전에 이미 외교기조 제1원칙을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불사정책으로 공공연하게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을 자행했다(장성민, 2001). 9·11을 맞아 이러한 호전정책은 순풍에 돛을 단 격이었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고, 부시 독트린, 핵태세비밀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등에서 북한을 핵선제공격 0순위로 설정하는 등 더욱 노골적인 전쟁위협 정책을 취했다.

이에 북한은 전쟁위기를 지기 위해 2차시해교전에 대해 사과하는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02년 9월 전격적인 조일정상회담을 열어 평양선언으로 조일 수교합의를 이루고,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경제협력체의 기반을 남한과 함께 추구하고, 신의주 경제특구를 만들어 개방체제를 본격화하고,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내부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북-미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거절하고 북한에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에 대한 우회적인 생명권 확보전략이라 볼 수 있다. 곧, 남북관계와 동북아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단기적 생명권 위협인 대 북한 전쟁위협에 대비하고, 내부의 개혁·개방과 동북아경제협력체를 통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해 장기적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김대중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와 일정한 일본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미국은 배제된 상태였다.

미국은 동북아 5개 국가가 냉전이후 처음으로 '지역협력체'의 태동이라는 탈냉전 지향의 새로운 질서 등장에 불안을 느껴 전격적으로 이 때까지 미루던 대북특사를 파견시켰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북핵개발 시인 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에 본격적인 전쟁위기를 조성해 동북아5개국의 경제협력체 태동을 봉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남북한을 궁지에 몰면서, 이에 동조할 조짐을 보였던 일본에 제갈을 물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6자회담을 전진시켜 북한을 오히려 역포위 하려는 전략을 현재 구사하고 있다.

2) 시간끌기와 명분 쌓기의 6자회담

북한은 미국의 북한 죽이기에 직면해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개발이라는 카드를 통해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제네바협정이 쌍무협정이기에 최소한의 이성이 있다면 고농축우라늄 문제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낯 짝이 있는 클린턴 정부에게 이를 문제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 역지력을 확보해 단기적인 침략전쟁에 대비하고, 개발과 개혁으로 북한을 경제붕쇄 하여 고사시키려는 미국의 장기적인 생존권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생명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한 북한은 핵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라는 생명과 생존을 위한 방패막이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생명·생존권을 보장해주면 곧, 안전보장, 외교관계 수립, 테러지원국 해체와 경제붕쇄해제, 원자력발전 대체 에너지 제공이라는 장단기적 생명·생존권을 보장해주면 핵무기개발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포기와 북한의 핵폐기'를 동시에 이행하는 '동시행동의 원칙'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3년 8월말에 열린 1차6자회담에서 '선 핵포기, 후 체제보장 및 관계 정상화'정책에서 더 나아가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에야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미사일, 상용무력, 위조화폐, 마약거래, 테러, 인권, 납치 등의 문제 등에 대한 북미 쌍무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2차6자회담에서도 부시는 외교상 혼지 않게 협상 중인 미국 대표단에 "부시 행정부의 선의는 막대한 수 있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여전히 있다는" 점을 북한대표에 통보하라는 긴급훈령을 내렸다. 지난 4월에 중국을 방문한 चे니 부통령은 미국대통령선거 이전에 중국이 북핵문제를 미국요구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북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구상'(PSD)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2차 6자회담을 끝낸 후 개최된 2004년 3월 2일자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측 협상대표 켈리는 "우리는 또한 핵 문제가 각국이 잡히기 시작하면 미사일, 재래 군사력, 심각한 인권 문제 등 다른 현안들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진척이 이루어지면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고 재확인했다. 3차 회담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6자회담은 일단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되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적 반대급부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와 명분 쌓기에 주력하는 미국의 장기적 음모에 불과하다. 물론 미국의 의도대로 6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까지의 틀로서는 전망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일찌감치 미국의 찰머스 존슨이 6자회담은 시간끌기와 명분 쌓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한 해결은 난망하다고 못 박았다.

3) 미국의 고강도전쟁 준비현황

부시정부는 북한이 '완전, 검증가능, 비가역적인 핵 프로그램의 폐기'(CVID)를 수락하지 않는 한, 곧 무방비상태로 굴복하지 않는 한 단기적 침략전쟁 연습과 장기적 고사라는 저강도전쟁을 동시에 전개하면서 북한의 정권·체제 교체를 꾀하고 있다. 이는 작전계획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공격 작전계획인 5026에서부터





대북 선제 핵 공격 위협 및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5027,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인 5028, 북한 정권붕괴 이후 난민구제 및 수용 등에 대비하는 5029 등은 고강도전쟁을 위한 것이다.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 침략전쟁연습의 강화가 그 일환이고, 이는 작년 초부터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월 초 사상 최초로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북한과 인접한 평택에서 '프리덤 배너 04'라는 해병대 훈련을 가졌다. 미 해병대 8,000여명이 참가한 이 훈련은 미 해병 제3원정군 병력이 특정 지역에서 10일 이내에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약 1만7,000명의 해병대가 한 달 정도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무기와 장비를 사전에 배치하는 훈련이다.

이어 3월 하순에 세계 최대 규모인 연합전시지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의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이 훈련에는 이라크 전쟁에 참가한 키티호크 함모전단, 오키나와와 하와이 주둔의 상륙부대인 해병대 제3원정군, 신속 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부대 등이 동원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보인 전격전을 염두에 둔 대북 침략전쟁연습이 행해졌다. 여기에서 약 1,000여명의 미 해병대와 한국해병대가 함께 DMZ 인접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벌인 훈련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미국의 고강도전쟁 연습은 더욱 기승을 부려 2004년 미국대통령선거에 즈음해 한반도 10월 위기설이 파다했다. 미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F-117 전폭기 14대가 한국에 배치돼 '작전계획 숙지 훈련'을 벌이고, 이어 스트라이크 이글 F-15E 전폭기 대대가 이미 광주공항에 배치되어 3개월 이상 선제공격 훈련을 해왔다. 2004년 8월17일자 성조지(Stars & Stripes)에 따르면 주한미군 소속 수천 명의 한국인 노무단 동원훈련이 실시됐다. 동해에는 북을 겨냥한 주한미군 전체의 화력을 가진 스테니스 항공모함과 MD의 이지스함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다.

최근 주한미군 가운데 잔류하는 주력 전투부대인 제2사단 1여단을 전 세계 해외주둔 미군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안에 '슈퍼여단'으로 바꿀 것이고 리처드 롤러는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고 동시에 본래 계획을 2년이나 앞당겨 2사단을 미태형사단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완전 변환한다고 한다.

4) 저장도전쟁 현황

이러한 침략전쟁연습은 단기적 침략전쟁인 고강도전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경제난을 장기적으로 가중시켜 내부적으로 교란 및 붕괴시키려는 저장도전쟁 또는 장기고사전쟁을 병행하고 있다.⁷⁾ 이 작전계획이 바로 5030이다. 이는 의도적

7) 노대통령의 LA선언이후 이러한 고강도전쟁위협은 부사나 미국 고위관료의 입으로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저장도전쟁의 계획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으로 군사긴장을 도발해 북한 군사경계력을 소진시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저장도전쟁으로 북핵위기를 장기화 해 북한의 내부적 계열을 초래하려는 작전계획이다.

2003년 3월 북한의 미그-29 전투기와 조우했던 미국의 전차정찰기 RC-135를 북한 영공에 밀착해 정찰을 벌이도록 해 북한이 대응조치로 전투기들을 비상 출격시키는 헛수가 잦아지면 그나마 부족한 항공유가 소진시켜 여러 부문에서 북한을 고사시킨다는 것과 같은 전략이다. 또 미군이 기습적으로 일주일 동안 한반도 변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 북한 지도부가 급히 지휘병커로 피신하고 군이 동원되면서 그 과정에서 비축품이나 식수 등 군사자원이 고갈되도록 강요한다는 내용도 있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광범위한 비정규전 전술도 이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제정에 주름이 가고, 군의 불만이 높아지며 정권교체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저강도전쟁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또한 중요한 구성 요소다. 인권이라는 말을 쓴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아래와 같은 장기적인 북한 정권·체제 붕괴전략 요소를 노골화하고 있다. 첫째,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을 위해 방송시간을 12시간 연장하도록 연 4백만 불 지원(sec4-4, sec103-a, sec104-a). 둘째,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가속화'(sec4-5). 셋째, '인권, 민주, 법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NGO에 보조금 지급(sec102a). 넷째, 인도적 지원조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을 무제한 허용(sec.202.-b1-d). 다섯째, 비인도적 지원조건에서 노골적인 체제붕괴 요소(sec202-b2)인 다음 조항: 종교자유와 기본인권 존중(A), 북한주민들과 미국 내 자손 및 친지간의 가족상봉 허용(B), 납치 일본인 및 한국인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C), 납북자들과 가족들의 귀환권 보장(D), 교도소와 강제노동수용소 실질적 개혁과 국제감시 허용(E),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과 행동을 기소 혹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F). 여섯째, 난민, 탈북자, 고아들의 거처나 수용소에 대한지원으로 연 2천만 불 예산 책정(sec203). 일곱째, 월경 경제유민에 대한 난민지위를 한국국적에 상관없이 부여(sec302).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인권이란 보편성을 빌미로 북한붕괴 저장도전쟁이라는 추악한 인권제국주의를 벌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강경규, 2005).

이 밖에 일본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선박유박손해배상보장법'과 같은 대북 경제봉쇄전략도 저장도전쟁의 일종으로 구사되고 있다. 2005년 3월 14일자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2004년 9~10월경에 북한을 장기적으로 고사시킬 저장도전쟁 전략 하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북한붕괴전략은 북한의 수입원의 숨통을 끊어버리기(choke off) 위한 '제재격리'(quarantine)라는 것이다.

이 전략은 북한이 마치 '위조화폐나 마약'에 의해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이 '불법' 돈거래를 막기 위한 제재격리(quarantine)를 쌓는 것은 정당하고, 이런



책략은 알 카에다 대처에 효과적이었다고 기술함으로써 '북한=불법행위자=알 카에다=악마'라는 인식을 유도하는 사기 놀음을 벌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침략시켜 북한해안을 봉쇄하는 위협천만환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대량살상무기 거래 봉쇄방안)의 발동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나돌고 있는 6월 위기설도 바로 이 불법적인 PSI를 미국 임의로 발동시켜 북한의 영공과 해안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저장도전쟁의 북한붕괴책략은 성공하기는 힘들지만 현재의 경제난 속에 허덕이는 북한에게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강요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지난 4년간 참을 만큼 참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 동안 반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강도전쟁이 힘든 상황에서 6자회담의 질적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선언이라는 대응이 나왔다.

4. '침략역외동맹'으로 변환 피하는 '미래한미동맹'과 동북아질서

이제까지 우리는 주로 '어제'와 '오늘'을 중심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고찰한 결과 이들은 평화지킴이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주범임을 확인했다. 이제 주한미군의 '내일'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주한미군은 92년부터 한-미간에 기획되기 시작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 따라 신속기동군 중심으로 재편되고 평택기지를 중심으로 재배치된다.⁸⁾ 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밝힌 것처럼 평택기지는 '혁명적인 신군사기술(RMA)' 통합체제를 갖춘 C4ISR 체제(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ensor+ reconnaissance)의 군사지휘부를 갖추게 되고, 최소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것으로 추진된다.

이 미래한미군사동맹체제는 미국 신군사전략의 규범적 범주에 의해 규정되므로 신군사전략의 속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1년 9월 30일에 발표된 4개년 국방보고서(QDR 2001-Quadrennial Defence Report)가 제시한 안보정책 4가지 기본방향은 미국의 전략중심축을 유럽(對 소련)에서 아시아(對 중국)로 이동하고, 전통적인 전방배치 전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략투사능력

8) 미래한미동맹 구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RAND연구소와 한국 국방연구원(Korea Institute of Defense Analysis, KIDA)의 공동연구 결과물인 '다음 세기를 위한 새로운 동맹(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1992년 한미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 따른 것으로 1996년에 영문판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한미간 '새로운 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양국의 사회적 이해가 걸린 동아시아지역의 미래불안정성과 이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는 어떤 국가의(중국을 상정할) 기도에 공동대응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특정군사위협(통일 전 북한에 기반한 안보위협 수준을 뛰어넘는 동맹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중국거점 지역안보동맹과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안보동맹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Pollack & Cha, 1996). 실제 미래한미동맹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다.



"(Projection Ability)을 곧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정보체계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군사전략의 기동성화-경량화-유연화 등을 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재편과 재배치로 신속기동대응군 체제로 변환되면서 경량화-신속화-유연화를 갖추고,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체제화를 기하고, '미래전투시스템'으로 무장된 미래형 '다목적군'으로 재편해 기존의 중무장 여단보다 강한 전투력과 여러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신속성을 확보하고, 해외기지 어디에 배치되든지 간에 언제라도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변화되고('10-30-30' 전략), 동맹국의 군대를 다목적군으로 구성되는 연합군 형태의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통합시키고, 동맹국 군대에 대해 무기체계 등 기술적 호환성에 국한하지 않고 군사조직과 과정, 전문영역 등까지 호환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산 첨단과학무기를 구입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신롤백(Roll-Back) 정책의 일환으로 선제공격 독트린을 도입하여 기존의 원상회복과 봉쇄를 위주로 한 '땅따먹기 전쟁'에서 신속하게 적의 중심부를 정밀 타격하여 초기에 전쟁을 끝내고, 점령과 정권교체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서재정, 2004).

이 규범적 범주에 따라 주한미군은 1만 2천 정도의 병력을 줄이지만 11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증강을 꾀하여 그 전투수행능력이 훨씬 증가된다. 또 한강 이남으로 제배치되기에 북의 장사정포 반격에 희생되지 않고 오히려 쉽사리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동시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역내의 방어동맹 범주를 뛰어넘어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시아지역군과 세계를 겨냥한 전 지구적 침략군으로 위상을 변환한다. 그리고 한국군과 작전-조직-운용의 연합 및 통합을 추진하고 무기체계까지 통합하면서 한미연합사 지휘체제는 더욱 강화된다. 한국군 또한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명분으로 100조 가까이 천문학적 군사비를 투입해 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다목적함기(KMH) 등 최첨단무기를 구입한다.

이 같은 미래동맹은 주한미군의 위상이 기존 한반도 역내의 방어적 역할인 '방어역내 동맹'을 벗어나 '침략역외동맹'으로의 질적 변환하는 것을 핵으로 한다. 곧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기존의 방어동맹체제 성격에서 지역안보동맹이나 '전략안보동맹' 등으로 새로운 침략동맹체제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신군사전략,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침략동맹 등이 적용된 전형이 이라크전쟁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사용한 군사전략은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로 그 입안자인 윌슨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전쟁발발 초기에 정밀유도탄, 열화우라늄탄, 모압(MOAB)폭탄, 집속폭탄 등을 투하하여 "적군의 마음속에 완벽한 무력감, 취약함을 만들어내어 …… 상대방과는 도저히 대적이 되지 않으므로 항복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해준 원자폭탄은 그들을 굴복으로 이끌었"으며 "원자폭탄이 없었더라면 전쟁은 더욱 길어지고 더 많은 희생과 비용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선행 전쟁경험에





서 나온 것으로, 초기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구사하여 상대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곧바로 이라크전쟁에 투입돼 주한미군기지는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기지가 되었으며, 자이툰 부대 등의 과전과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으로 한·미 침략동맹이 실제 구현된 셈이다. 한·미 양국이 2004년 2월 24일 서명하고, 3월 3일 후속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발표된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개정 내용에는 상호지원 적 용지역을 한반도와 북미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 대상품목에 항공수송이용과 비살상군사장비의 임차 추가 등이 포함되어있다.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개정된 이 협정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이는 침략전쟁에 한국군수품을 동원하는 것으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적용범위인 한반도 역내와 목적인 방어를 위협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미·한미동맹 구상이 실행되면 21세기 민족자적 핵심과제인 평화, 통일, 민족 자주성의 구현을 가로막을 구조적 조건을 더욱 원천적으로 심화시키게 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논해겠다.

첫째, 미국은 평택기지를 ‘전력투사중추기지’(PPH)와 ‘주요작전기지’(MOB)의 중간급 기지나 주요 작전기지로 삼고 있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외국군주둔 그 자체가 민족자주권의 원천적 훼손을 가져온다.

둘째,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인 평택으로 이전하여 북한의 진방배치 장사포 사정권에 벗어나고 선제공격과 공중타격에 유리한 전략지대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구조화가 이뤄진다.

셋째, 주한미군의 동아시아와 지구촌 전체의 신속기동군화, 역할 재조정과 재배치, 전력증강 등은 MD체제 추진과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패권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만사태 등에 따른 중·미 분쟁이나 전쟁에 한반도가 말려들어 ‘제2의 청일전쟁’이 재연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통일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는 캠프 한미연합사 참모장 겸 미8군사령관이 국방부기차단에게 “한미동맹은 195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안전보장이 목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안보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고 상호 운용 가능한 동맹으로 변화하고 …… 한미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뿐 아니라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도 드러난다.

또 군사전문 주간지 『디펜스뉴스』(2004년 6월 1일자)는 “한국을 (병력 전개)의 중추로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임무수행을 위한 거점을 구축한다는 미국 방부의 새로운 목표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잡지는 미군 재배치의 기본 목표는 기밀 분류된 「작전가능성연구」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 미국 방부는 “10월 이내에 원거리 전장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30일 이내에 적을 격퇴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또 다시 전투할 준비를 갖춘다”는 ‘10-30-30 전략’을 제시



했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과거 50년 이상 한국군과 조율했기 때문에 이런 거점으로 서 적실하다고 보았다(『한겨레신문』 2004. 6. 3).

넷째, C17 수송기나 군함 수송이 쉬운 공군기지와 항만을 끼고 있는 오산평택을 기지화 함으로써 북한의 진방과 후방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이상적 기지를 확보했으며,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시아군으로서 주한미군의 기동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현격히 높여 주한미군기지가 대만사태 등 미국 침략전쟁의 발전 및 지휘·통제기지가 된다(서재정, 2004).

다섯째, 미·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변환은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것이므로 주일미군 재편·재배치와 연동되어 한·미·일군사동맹을 강화 및 통합한다. 미·일동맹은 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어 미국과의 신방위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일체화’로 표방되는 통합과 연합이 이뤄지고 올해 안으로 신미일안보선언이 있을 예정이다.

일본은 자체적으로도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쓰면서 이미 군사대국이 되었고, ‘유사법제 체제’에 의해 ‘보통국가화’되고, 미국을 따라 선제공격을 법제화하는 등으로 21세기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미국의 동북아패권과 신냉전의 군사적 토대 구축에 ‘완벽해’ 정도로 편입·통합되면서 아류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과 재배치의 핵심은 주일미군이 아시아 전역과 중동의 위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령탑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기지 공동사용 등을 통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미·일안보협력의 효율화 등이라고 알려졌다. 공군의 경우 팔의 미 제13공군사령부가 요코다기지의 미 공군사령부와 통합되고 일본 항공총대사령부도 요코다로 이전하여 미·일 공군의 효율적 운용을 추진한다. 육군은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워싱턴 주에서 가나가와현의 자마 기지로 이전하여 주한 미 2사단을 포함한 아태지역 미 육군을 통괄하는 전선사령부가 된다. 오키나와 해병대 1만 6,000여 명 가운데 20~30%를 자마 기지와 홋카이도 육상자위대 훈련장으로 이전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는 제7함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로써 아태지역을 관할하는 미 육해공군사령부가 모두 일본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사령부’를 만들고, 더 나아가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와 이를 통합하여 더 큰 사령부를 만들 가능성도 있음직하다.

주일미군이 아태지역과 중동지역의 사령탑 기능을 하고 일본 자위대와 일체화하는 것은 더욱 강화된 침략동맹으로, ‘일본영토의 공동방위와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지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이고, 물론 한·미방위조약도 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동북아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적대관계를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⁹⁾



여섯째, 미 합참 비전(Joint Vision 2020)은 동맹국과의 연합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무기체계와 작전조직체계의 상호 호환성을 꾀하고 있어 현존의 한·미연합사휘체제보다 더 강도 높게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군사하위체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군사 구조적으로 자주권과 평화권의 심각한 제약에 받게 된다.

일곱째, 주한미군과 미군기지가 2030~40년경에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 동북아 신냉전의 군사적 토대로 활용되어 동북아 신냉전체제를 촉진·고착·제생산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군사전략에 의한 미군 재편·재배치는 해외주둔 미군이 신속 전개군으로서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화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을 전환하는 데 있다. 이제 미국 신군사전략과 밀접히 연동되어 추진되는 미래동맹체제가 우리 민족의 핵심과제인 자주·평화·통일의 역사행로를 얼마나 가로막을지는 분명한 것 같다. 기존의 예측적 한미동맹이 환갑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더 예측적이면서 침략동맹의 성격을 띠는 미래동맹체제로 대체되어 평화와 통일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규범적 범주가 되는 ‘제2 농노화의 길(Second Serfdom)’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 제1항의 합의에 따라 자주와 자존 지향의 민족사를 모색해야 한다.

5. ‘제2의 청일전쟁’위기 대응의 반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균형자전략

앞에서 주한미군의 재편·재배치·전략적유연화를 속성으로 한 변환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용이하게 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구조적으로 가져온다고 보았다. 주한미군 변환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9일 미·일 안전보장위원회(2+2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범위를 기존 일본과 주변지역에서 중동을 포함한 아태지역으로 확대하는 공동전략 목표를 발표하고, 그 대상을 북한과 중국으로 지목해 ‘불투명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천명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이 대만사태를 안보정책에서 위협으로 공식화 해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한 포위망 전략을 공개적으로 세운 셈이다.

또한 1976년 제정 이후 95년 처음 개정된 이래 9년 만에 두 번째 개정된 일본의 2004년 판 ‘방위계획대장’은 러시아를 직접 우리 대상으로 적시했던 지난 76, 95 대강과는 달리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을 주요 안보위협요인(한국의 주적)으로 적시했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요인이며 중국군의 근대

9) 최근 일본의 영토분쟁, 역사왜곡, 군사대국화 등이 한·중·러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런 미국의 일체화와 통합화로 가는 미·일동맹에 뿌리를 둔 국우세력의 준동이고 아류패권주의로 보아야 한다.



화와 해양에 있어서 활동범위의 확대 등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일본 주변에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 등 불투명,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고 명기했다. 동시에 전수방위와 침략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기본적 방위력 구성’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기능적, 탄력적, 실효적 방위력”구상으로 전환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반국가분열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법은 “대만 독립 세력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는 경우” “중국은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를 결실을 천명하고 있다.

이 대만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해 있다. 대만의 독립선언은 중국의 무력침공을 초래하고, 이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개입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일본 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높다.¹⁰⁾ 이때 만약 주한미군이 철군되지 않고 또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된 상황이라면 이곳 남한 땅은 미국의 대중국 침략 발전기지와 대리 전쟁터가 되는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2003년 10월 25일 대만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만총통 첸수이볜은 “오는 2006년 새 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2007년 국민투표를 거쳐 2008년 새 헌법을 실시하겠다”면서 “이는 민진당 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만 인민을 위한 것”이고 “대만은 특정 국가의 1개 성이 아니며 특별행정구도 아니고.. 대만과 중국은 일본(일국)과 대만(일민)은 하나의 중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보고서 대부분은 중국을 21세기의 주적으로 삼고, 예견되는 세계전쟁을 중국과의 전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 해태세 재검토(NPR) 비밀보고서도 선제 핵 공격 대상 7개 시나리오에서 북한과 중국을 포함시키고, 핵 선제공격의 구체적 사례로 ‘북한의 남한공격’ ‘중국의 대만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은 최근 미사일 388기, 잠수함 8척, P-3C 대잠초계기 12대 등 182억 달러 규모의 신형무기 대만판매를 승인했다. 또 주한미군은 오산(평택), 수원, 군산, 광주에 PAC3 요격용 미사일 배치해 중국계량 서해안MD배트를 기뢰추진하고 있다.

2003년 대만 군 당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조짐이 있을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와 산사당 등 주요 목표들을 선제공격해 중국의 반격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두세(전갈) 계획’을 수립했고 미국제 페트리엇트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에 중국은 대만해협의 동산다오에서 대만 모의 공격 등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해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1895년 청일전쟁 당시 그들은 일본 땅도 아니고 청나라 땅도 아닌 바로 조선 땅에서

10) <국방백서 2004>는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군사개입 규모를 “병력 69만, 함정 160척, 항공기 2,000대 규모”로 잡고 이는 “해군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략”(61쪽) 해당하는 것이다. 허약한 북한군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전력투입은 한반도전쟁이 중국과 러시아 개입으로 비화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으로 미국의 북한침략전쟁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이어져 ‘세계 3차대전’으로까지 비화될 개연성을 가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을 치러 조선 땅은 황폐화 되고 조선인은 개죽음을 당했다. 우리가 왜 미국과 주한미군 때문에 '제2의 청일전쟁'을 당해 또다시 이런 개죽음을 감수해야 하는가? 21세기의 이 전쟁은 핵전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반도 자체가 영원히 종말을 고할 위형성에 노출됨을 의미한다.

이런 끔찍한 위협에 대응해 노대통령은 2005년 3·8선언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 중국 거점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위협성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인 동북아균형자전략이 제시된 것이다.

'제2의 청일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2008년 이전에 전쟁유발자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전면 철수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을 철폐하고, 한·미관계를 탈미(脫美)·비동맹(非同盟)·중립화의 우호친선협력관계로 새판짜기를 하는 것이다.¹¹⁾ 이러한 힘이 아직 부족하면 최소한도 일체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일본식의 '사전협치'에나 동북아를 제외한 지역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고 동북아지역만 허용하지 않는 '제한적 전략적 유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식의 사전협치의제가 아무런 실효가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다.¹²⁾ 분명한 것은

11) 일부에서는 대미 경제의존도 때문에 주한미군 전면철군과 한미군사동맹해제는 외국자본철수, 신용평가 하락,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의 본질적 속성은 국경을 초월한 확대재생산성 때문에 곧, 자본의 신자유주의성과 세계화 속성 때문에 자본은 돈만 되면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든 가기 마련이다. 주한미군이 철군되고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에서 일반 우호협력 관계로 바뀌면 한반도는 오히려 전쟁위협에서 벗어나기에 초국적 자본의 한반도 안정적 투자는 더 활기를 띠 것이다. 또한 미국정부와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일치되지 않기에 미국 정부의 압력을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부시정부와 밀착한 군수자본과 월런턴 정부와 밀착했던 금융자본의 이익은 철저히 대립되어 한 목소리 불가한 것이 이미 입증되었고 또 개별 자본본과 사이의 이해관계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서 보듯이 상충되어 행동동일은 이뤄지기 힘들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부시정부는 이회창을 노골적으로 지원했지만 월기는 노무현을 지지했다. 노 후보가 집권하면 재벌개혁을 단행해 미국 금융자본이 한국 알짜기업을 쉽게 사냥할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라크파병 당시 신용평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무디스와 S&P 관계자) "외국 투자자들과 신용평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파병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다." "S&P의 신용평가위원회에서는 미국 외에 여러 국적을 가진 애널리스트들이 참여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다...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신용등급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4년 주한미군의 1개 여단 이라크 차출과 주한미군 12,500명 감축 발표가 있었지만 미국의 대표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A3)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1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사전협치에 의한 제한적 허용 모두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의 발동요건에서 규정한 방어조항과 3조에서 규정한 한반도 역대조항을 위배하며 한·미 5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식 사전협치의제는 사전협의 양해사항을 병렬배치의 중요한 변경(육군 1개 사단 정도, 육군에 상응하는 공군, 1개 기동부대 규모의 해군병력), 장비의 중요한 변경(핵탄두나 중거리 미사일의 반입 및 기지 건설), 국동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한 일본기지의 사용(전투작전 행동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무력화 되었다. 곧, 핵의 대상 병력 규모 너무 커 실효성이 없고, 확인 불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하에서는 철저히 협의 논리가 지배하고 전투현장의 강경목소리나 정치논리를 압도하게 되어 있어 부분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 등은 한반도가 중미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

6. 동북아균형자전략에 의한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 모색

1992년 한미안보협의(SCM)의 합의에 따라 미국 RAND연구소와 한국 국방연구원(KIDA)이 공동으로 연구한 한·미동맹보고서인 '새로운 동맹'과 김대중 전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 등은 동북아 세력균형과 평화조정자로서 역할 때문에 현재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동북아 세력균형론은 해양세력 군(群)과 대륙세력 군(群) 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기 한·미·일과 중·러·북한을 지칭한다. 세력균형론은 주로 군사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여기에 걸 맞는 지표는 연간 군사비 비교일 것이다. 해양세력인 한·미·일의 삼각군사동맹의 군사비는 미국 4000억(2004년) 일본 500억, 한국 200억으로 총 4,700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대륙세력인 북한-중국-러시아 느슨한 연대의 군사비는 중국 300억(2005년 전인대는 299억 달러 확정), 러시아 250억, 북한 15-17억 정도로 총 6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해 전형적인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진정한 동북아세력균형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배제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음은 이 간단한 숫자에서도 쉽사리 확인된다.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과 일본의 '아류 패권주의전략'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평화위협 요소이므로 응당 주한미군은 동북아 평화와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철군되어야 하고 한·미군사동맹은 해체되어야 한다. 대신 남과 북 또는 통일조국의 동북아 평화조정과 균형자 역할 확대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협력체와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동북아 균형자전략'을 추진해 미국의 대북침략이나 '제2의 청일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해 한반도의 안위를 지키고 동북아가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장기적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는 19세기 말 허약한 대한제국이 아니다. 세계적 수준에서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5%내에 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동북아에서는 오히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정

가능한 핵비핵 검증 무기는 무방비 상태이고, 핵무기를 장착해도 일시적 기형이나 통과는 사전협의 대상 제외되고, 이동기항·정찰·정보·경계·보급 등의 작전행동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전투작전이든 하더라도 전투작전 명령이 일본의 영해나 영공에서 발령되지 않으면 사전협의 대상 제외되었다. 더구나 "한반도에서 주한 유엔군에 대한 공격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채택한 대일 기본정책 NSC 6008/1의 비밀 합의로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한국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어 그 한계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배치, 이동에 관해 주한미군의 일방적 주둔권을 허용하고 있어 상위법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고 미국의 신군사전략 상 사전 협의제는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전면철군이야말로 우리의 대안이다.



규모의 위상을 가진 것이 남과 북 또는 통일조국이다. 바로 이 적정규모와 지도력만 있으면 동북아의 탈미(脫美)·비동맹중립의¹³⁾위치를 평화조정자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왜냐면 주변의 강대국이 이런 역할을 하려면 이는 절대적 안보를 추구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근원적으로 긴장과 위기의 연속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패권추구와 거리가 먼 크지도 작지도 않은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자임할 경우 강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8일 노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우리를 지킬만한 녀석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막강 국군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변역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라는 폭탄선언을 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언제나 북한에 비해 군사력 열세를 일부러 드러낸 박근혜 은 국방부 발표에 승판이든 우리들에게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국군, '동북아세력균형자로서'의 국군이라는 찬사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하드웨어 측면의 군사력에 관한 한 노대통령은 엄연한 현실을 말한 것이다. 먼저 군사비를 보면. 남한 군사비는 올해 무려 200억 달러로 북한의 10배가 넘으면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 독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8번째다. 경제규모도 북한의 33배를 넘으면서 세계 10-11위 정도다.

육군에 비해 언제나 푸대접을 받는다는 해군력을 보면 이치스함 도입 이전인 지금도 현대전의 필수조건인 1천t 이상 전투함 숫자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을 능가하고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이다. 밀리터리 밸런스 2003-2004에 의하면 이탈리아 18, 스페인 16, 독일 13, 영국 34, 프랑스 34, 한국 39(최근 완공된 4천 5백톤 문무왕 구축함 포함 40척)이다. 여기에 해양경찰대 소속 16척의 합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푸대접 받는 해군이 이 정도면 육군이나 공군의 군사력은 더 말할 나위없다.

또 국방중기계획은 자주국방이란 명목으로 05-09년 5년 동안 무려 99조를 들여 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이치스함, 차세대 미사일 등 온갖 첨단무기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 수준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5-6위권 안에까지 들 수 있을 정도다.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면서도 국가주권의 기본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기상조론이나 불감당론을 펼치면서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는 군 수뇌부나 고위관료 및 주류언론, 그리고 동북아균형자전략을 냉소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국제정치학

13) 현재의 남한은 군사적으로는 그야말로 주권을 거의 상실한 미국의 완전한 예속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화 추구는 필연적으로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이 공조를 하는 민족공조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다음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때로는 한중공조, 한러공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체결 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동등하게 우호친선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자 부류 등은 그야말로 승미적 노예주의와 공미적 자폐주의 중병에 걸려 치유불가능 수준이기에 지도력을 갖출 수 없다. 이러한 노예주의와 자폐주의는 미국의 예측과 정책과 맞물려 군부 내에 구조화되어 있다.

베트남전쟁 한국공파병 당시 남의 나라에서 행사한 적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한 번도 제대로 행사해보지 못한 게 우리의 군부다. 이러니 한국군의 소프트웨어 전쟁수행능력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이런데도 마치 하드웨어가 부족해서 전쟁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첨단무기 증강을 유도해 미국 퍼주기과 미국에 목줄리기를 자행하는 게 우리 군부의 현주소다.

상호운용성이라는 것을 내세워 첨단무기가 거의 미국제 일색으로 도입되고, 이들 첨단무기 운용 및 활용과 작전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거의 100% 미국에 예측되고, 이를 주관하는 고위 군부나 국방부 관료가 자폐증과 노예병에 걸린 상황에서, 첨단무기 도입이 많아질수록 한국군은 더욱 더 구조적으로 대미 예속이 심화되어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은 물 건너가 버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노예주의-자폐주의로 연결된 이들 군사영역의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만 이 딜레마는 해결 가능하다. 이 때야만 노대통령이 말한 동북아세력균형자전략은 군사력을 뒷받침 받을 수 있다. 다른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주류 정치세력, 조종층 주류신론, 국제정치학자를 중심으로 한 주체성 없는 주류지식인, 근본주의 기독교인, 외교부 국방부의 고위관료와 고위 군장성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기성 주류는 세계 10위권의 현존 경제력이나 하드웨어 군사력이 마치 조선조 말엽의 우리 국력정도로 보고 있다. 무조건 미국의 보호막에 자기를 위탁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철치한 골수 숭미(崇美) 자발적 노예주의와 미국 앞에 서면 자긍심이란 반 쏘아치도 없는 공미(崇美) 자폐주의 부류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실이 4월 7일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 응답자의 14.7%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60.0%가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각각 답해 지지율이 74.7%였다. 현실에서 대대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나름의 여지가 있다', '가능한 일이다'는 답변은 각각 68.0%, 10.7%로 조사된 반면 '거의 현실성이 없다'는 응답은 20.2%에 머물렀다. 또 71.6%가 동북아 균형자론이 기존 노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05-04-10 16:38).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민족공조를 선호 62.9%,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미국침공에 대비한 방어용으로 보는 43.8%, 북한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위협국가로 보는 60%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일반이야말로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양의 자발적 노예주의와 자폐주의 중병에 걸린 기성주류와 편이한 인식과 주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탈미(脫美)·비

14) 4월 29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한 "동북아평화와 한국의 균형자론" 학술심포리엄에서 발표된 대





동맹중립의 위치에서 균형자전략을 수행하는 데는 경제력과 군사력 같은 경쟁권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연성권력 또는 지도력 또한 필요하다. 이는 자발적 노예주의와 공미 자폐주의에 빠진 남한 기성주류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오히려 우리 일반 국민과 민중이야말로 연성권력의 뿌리이고 주체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구도를 정착시키고 이차적으로는 동북아 평화공영협력체를 형성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7. 평화보장체제를 향한 장기구조사적 과제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한반도의 전쟁주범은 미국과 주한미군임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선적 과제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체제인 한-미 군사동맹을 철폐하고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 일반과 맺고 있는 우호친선협력관계로 한미관계에 새판을 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쟁주범의 물적 토대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전면 철군시키는 것이다.

만일 한-미동맹철폐와 주한미군 전면철군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봉쇄전쟁유도의 물적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로의 재배치와 재편=아태 기동군화=전략적 유연화=한반도의 미국침략기지화=한국군의 미국침략군 '하수인화' 등을 막아야 한다.

지금 한국 외교부와 미국은 '차관급 고위 전략 대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방어에서 '침략'으로, 한반도 역내에서 역외로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미 안보공동선언으로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관법적으로 합법화하려 한다. 또 외교부 국장급회의인 '전략적 유연성' 회의를 비밀리에 진행시켜 주한미군 역할 확대의 범위, 수순, 해외출동에 대한 사전협의 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안보정책구상(SPI)회의로 한-미동맹 비전 제시, 미군재배치 등 FOTA 이행사항 점검, 군사임무 전환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추진 실태 점검, 한미 지휘관계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외교적, 제도적, 법적으로 정착화 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미군기지 이전 저지투쟁 등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러한 단계적 평화운동으로 이를 저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노무현 선언은 이 전략적 유연성 불허를 기조로 갖고 있지만 '한미 힘 관계'의 불균형, 남한사회에 기성 주류에 포진해 있는 대미

부문의 글들이나 논평은 한국 기성주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폐적이고 공허한 논의에 불과했다. 이들은 동북아균형자전략을 노대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자주국방, 친미주의 발원 등과의 총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고찰하지 못하고, 주한미군의 군사변환을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미동맹의 특에 간혀 논의를 하는 자발적 노예주의에 빠져 있었다. 아시아사학과학연구원 주위 제42회 '동북아균형자론' 학술심포럼 자료집, 일시: 2005년 4월 29일, 장소: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



자발적 노예주의, 외교부와 국방부에 뿌리박힌 맹목적 대미추종주의 등 때문에 그 실현이 순탄치 않다. 시민사회의 평화권 정취운동과 함께 할 때 노무현 선언은 제 궤도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미 투쟁을 통한 평화권 정취와 더불어 동북아관련국과 장기간의 상생구조를 창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경제안보협력체 형성과 탈미(脫美)비동맹중립의 위치에서 동북아균형자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강화를 통한 대 중국 포위봉쇄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과 일본의 아류패권주의를 무산시키고 동아시아인에 의한 동아시아 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균형자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여중생살상사건과 촛불행진을 계기로 우리의 민중의식은 기존의 주한미군불가피론에서 미군철군당위론으로 바뀌고 있다. 개인과 민족의 생명을 지키려는 생명권, 불평등하고 비정상적인 한미관계를 대등한 한미관계로 바꾸자는 평등권, 한강 독목물 등에 대한 환경권, 국제 폭격장이 되어버려 주민들의 삶이 원천적으로 파괴된 데 대한 생활권, 주한미군 범죄에 희생된 한국인의 인권, 외국군을 철군시켜 군사 작전권을 되찾고 자주권을 높이자는 주권,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미군을 철군하자는 통일권, 주한미군이 전쟁 억지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고 철군을 주장하는 평화권과 생명권,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군사체제가 주한미군에 종속되어 자주국방이나 자주적 무기체제가 훼손된다는 군사 기술적 자주권, 우리 땅을 되찾아 땅주인이 되겠다는 재산권 등의 차원에서 철군당위론은 그 위세를 얻고 있다.

이제 반미운동과 주한미군 철군운동은 미시적 삶의 차원과 자주적 민족사 행로라는 거시적 차원의 문제의식이 결합되어 대중성을 획득하고 있고 한국사회에서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회운동단체 뿐 아니라 평택-광주-군산 등의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생활권이나 생존권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와 앞에서 확인한 대로 국민일반의 여론조사에서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 '북한보다 미국이 전쟁주범', '한반도 평화 위협 국가로 미국 1위', '친근한 국가'로 미국보다는 북한, '동북아균형자 지지율 70%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이제 한-미동맹철폐와 주한미군 전면철수는 결코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라 머지않아 성취되고 말 가시적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

장기적 상생구조를 위한 동북아균형자전략 역시 일반의 70% 이상 지지율에서 나타나듯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 하에서 아래와 같은 한반도평화보장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3.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반도평화보장체제



	안보위협대상	안보(평화) 보장체제	안보(평화) 보장수단	기타
현존 안보체제	북한전쟁위협 억지	북한거남 미국의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안보체제	생무주의, 북한주적론, 남한군비 확충,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한미공조, MD체제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	미국거남 민족동북아의존 한반도평화보장체제	미국거남 민족동북아의존 한반도평화보장체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철폐, 민족공조, 남북평화선언, 남북군축, 북미대화협정, 다자주의, 동북아협력안보, 연합성명발 등에 의한 부분통일 조기 실현	전시작전권 환수, 북한주적 폐기, 한미상호방위조약폐기, 한미공조체제의 한미우호관계 수립, MD체제 편입 거절, 한반도비핵식대화, 동북아경제협력체, 탈마중립의 동북아균형자전략

8. 맺음말

한반도는 세 종류의 전쟁위협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조장한 이른바 '북핵위기'에서 비롯된 대북 단계적 전쟁위협과 장기적 저강도전쟁, 마일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제2의청일전쟁'위협이다. 비록 단계적인 전쟁위기가 극복된다하더라도 미국의 동북아신냉전패권전략구도와 주한미군 및 이들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전쟁위기와 제2의 냉전으로 회귀시킬 것이다. 이 경우 민족의 생명권과 평화권 그리고 통일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채 우리 민족은 심대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이러한 파괴적인 반민족 행보는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 시점에서 이를 막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되어 우리 민족은 또 다시 미국에 의해 제2의 분단과 제2의 냉전을 강요당하고 자주권은 영구적으로 상실될지 모른다.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여 인식민지적 예측 하에 농민 지가 일본식민지 전 기간의 두 배에 가깝다. 또 분열된 후삼국시대의 두 배를 넘는다. 이렇게 오랜 동안 미국의 예측 하에 있으면서 남한 사회 기성주류는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에 빠져 미국이 전쟁위기와 통일구도막기의 주범이란 것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시대에 걸 맞는 민족공조와 탈미(脫美)비동맹중립의 위치에서 동북아균형자전략을 구사해 '동북아 경제평화협력체'를 형성하고 그 구도 속에서 한반도 평화, 자주, 통일, 동일을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의 장기적 상생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멀더라도 또 갖가지 시련에 직면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에게 부과된 역사적 책무이고 이성의 구현으로서 우리



민족사가 요구하는 당위적 역사행로이고 한반도와 통일조국의 새로운 위상이다!

참고문헌

- 강정구, 1994.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대응의 실체: 한국·미국·IAEA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제간 27호(1994년 겨울호),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역사비평사, 1996)에서 재수록.
- 강정구, 1996.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 강정구, 2000.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전쟁의 통일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통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48호 2000년 겨울호
- 강정구, 2002. "서해교전과 맹목적 내전성적의 허구성", <진보평론> 2002년 가을호..
- 강정구, 2002. "분단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 해결방향", 한국인권재단,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 강정구, 2002.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 강정구, 2003. "미국의 실패권주의와 한반도 전쟁위기 및 새로운 안보패러다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3권1호.
- 강정구, 2004. "주한미군불가피론과 미래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 <역사비평> 통권 68호, 2004년 가을호
- 강정구, 2004. "이라크전쟁과 파병: 미국의 야만성과 한국의 자발적 노예주의"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63호, 2004년 가을호
- 강정구 외, 2005.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 한울
- 강정구, 2005. "북한인권법의 반인권성과 인권제국주의" 한국산업사회학회 주최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장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5년 4월 22일).
- 국가인권위원회주최 2004. '북한인권 국제실효지침' 자료집, 일시: 2004년 12월 1일, 장소: 경남대극동문재연구소
- 국방부, 2004. 『2004 국방백서』, 『국방백서 2000』
- 김수암, 2005.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변화" 통일연대, 실천연대, 민변, 민주노동당, 민연련,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주최,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 일시: 2005년 2월 3일,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김승교, 2005.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 통일연대, 실천연대, 민변, 민주노동당, 민연련,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주최,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 일시: 2005년 2월 3일,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김양현, 2004. "생태적 인간중심주의의 인권과 자연권의 조화를 위한 이론들의 모색"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4권 1호
- 김용태, 2003. "폭력과 인권"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4권 1호
- 김재관, 2003.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전략: 미중 간의 안보의교를 중심으로",





경남대국동문재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19권 1호(통권40호), 2003년 봄.
문화방송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주한미군)」 2003년 4월 20일 방송
박성관, 2002. 「조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경남대국동문재연구소 『동북아연구』 7권, 2002.
신은희, 2004. “북한의 인권문제와 통일 다원주의” 2004년 5월 29일 ‘민족 통일학회’ 월례 발표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제42회 ‘동북아균형자문’ 학술시론포럼 자료집, 일시: 2005년 4월 29일, 장소: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
양석원, 2003. 『탈식민주주의의 정신분석학: 마노니와 파농을 중심으로』 고부영역음, 『탈식민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원승룡, 2003.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담론 분석”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3권 1호
연효숙, 2003. 「식민탈식민시대의 주체와 타자」 학술단체협의회,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유정애, 2004. “한미보수세력의 ‘반북공생’ 생명줄은 미국의 자금지원”, 『민족21』 2004년 1월호
이금순, 2004.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반응”, 국가인권위원회주최 2004.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일시: 2004년 12월 1일, 장소: 경남대국동문재연구소 통일관
이철기, 2003.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한국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위하여” 민언련 주최 토론회 “주한미군과 반미담론 그리고 언론” 발표문, 2003. 3. 28.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이종환 편저, 2002. 『부시 행정부와 북한』 삼인
임동원, 2002. “한반도 안보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미래전략 13회 포럼, 2002. 4. 20.
장성민 편역, 2001,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김영사.
정성강, 2004. “미국의 북한인권법”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4년 11월호
정세진, 2003. “한반도 평화문제와 한국 시민사회: 최근의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평화만들기> 53호 2003. 2. 21.
정인섭 편역, 2000. <국제인권 조약집> 사람생각
중국의교부, 2004. “2003년 미국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United States in 2003)
최협, 2003. “제미한인사회의 인권문제”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3권 1호
Elich, Gregory, 2002. “Targeting North Korea”,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sation (www.globalresearch.ca/globaloutlook/orderform13.html), 31



December 2002.
Halloran, Richard. 1998. “Soft Smile... But Carry a Big Stick”,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8. 12. 3.
Jack Donnelly, 2002. International Human Rights, 박정원 역 <인권과 국제정치> 오름
Fanon, Frantz, (이석호 옮김), 1998.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Harrison, Selig. 이종동 외 옮김. 2003. 『코리아 엔드게임』 삼인
Hays, Peter. 1991.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Lexington Books(고대승·고경은 옮김. 1993,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핵 딜레마』, 한울).
Johnson, Chalmers. 2003. “Korea, South and North, at Risk”(www.tomdispatch.com) 2003. 4. 18.
Oberdorfer, Don. 1998.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중앙일보사, 『두 개의 코리아 : 북한과 남조선』, 1998)
O’ Hanlon, Michael and Mike Mochizuki, 2003.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McGraw-Hill
Sigal, Leon. 구갑우 외 옮김, 1999. 『미국은 협력하지 않았다 : 북한과 미국의 핵 외교』, 사회평론
Stephen Schute & Susan Hurley ed., On Human Rights: The Oxford Amnesty Lectures, Basic Books, 199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현대사상과 인권> 사람생각, 2000
U. 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10.
U. 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2001.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북남)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선언문

오늘 우리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7천만 겨레의 뜨거운 통일 열망과 의지를 모아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북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결성을 온 민족 앞에 선언한다.
민족수난의 40년과 이어진 60년의 분열은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남북(북과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반만년의 민족사를 개척해 온 자랑스러운 민족답게 내외에 조성된 온갖 난관과 위협도 박차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역사를 전진시켜 왔다.

그 어떤 장벽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고 사상과 제도, 정파와 종교, 지역의 차이도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겨레의 마음을 결코 갈라놓을 수 없었다.
현 시대는 6·15 통일시대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새로운 역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북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분열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북과남), 해외의 각 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망라하여 결성된 상설적인 전 민족적 통일운동 연대기구이다.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북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결성은 민족수난과 분열의 100년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다. 전 민족적인 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공동선언발표 이후 지난 5년간 통일운동에서 거둔 성과를 계승하여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민족 대단결의 모체,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의 첫 걸음을 내디딘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북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이끄는 정신은 6.15 공동선언이다.
6·15 공동선언은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자주선언, 평화선언,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민족의 자주역량으로 평화로 통일로 가는 활로를 밝힌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이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에 천명된 대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풀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그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자주적 연대와 협력이 풍성하게 꽃피를 수 있게 할 것이다. 평화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평화수호는 우리에게 맡겨진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우리는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고 이 땅에서 전쟁위협과 군사 적대결과 긴장을 걷어내며 항구적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온 민족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5돌,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뜻 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해로 만들자.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와 평화를 지켜내고 단합과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

세계 앞에 우리 민족의 지혜와 슬기, 단결을 보여주자. 

2005년 3월 4일

금강산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2.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결성 현황

■ 남북해외공동위원회

■ 남북해외통일운동대표자 6.15공동위원회 결성 합의(금강산)
- 2004년 11월 23일 ~ 24일

■ 북측준비위원회 결성 - 2004년 12월 2일

■ 남측준비위원회 결성 - 2005년 1월 31일 (상임대표: 박낙성 - 서울대명예교수)

■ 해외준비위원회 결성 - 2005년 3월 1일 금강산
(상임대표:곽동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상임고문,
공동황 - 미주거주,한국신학대학 명예교수
(■ 일본준비위, 중국준비위, 재미준비위, 캐나다준비위, 독립국가연합준비위,
오세아니아준비위)

■ 남북해외공동준비위원회 결성 - 2005년 3월 4일 금강산

■ 6.15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원회 지역본부 결성 현황

*괄호 안 상임대표

■ 전북본부 결성 - 2005년 3월 9일 (이강실 :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

■ 부산본부 결성 - 2005년 3월 18일 (이정아 : 부산연합 상임의장)

■ 대전충남본부 결성 - 2005년 3월 24일 (김용우 : 대전충남통일연대)

- 48 -



우리 민족끼리



■ 인천본부 결성 - 2005년 4월 7일 (김병상 : 천주교 인천교구 신부)

■ 경기본부 결성 - 2005년 4월 29일 (한명수 : 목사)

■ 대구경북본부 결성 - 2005년 5월 6일 (대구-백형국 : 대·경 통일연대.
경북 - 배용환: 북북 어린이 영양빵 공장 대구경북 본부)

■ 충북본부 결성 - 2005년 5월 11일 (노영우 : 충북평화통일연대 대표)

■ 경남본부 결성 - 2005년 5월 20일 (조영건 : 학술위원회 상임의장)

■ 제주본부 결성 - 2005년 5월 31일
(임문철 : 평화를 위한 제주 종교인협의회)

■ 울산본부 결성 - 2005년 6월 2일
(장대원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광주 전남본부 결성 - 2005년 6월 15일
(강신석 : 종교, 김용채 : 시민,
이명환 : 통일, 허연 : 민중, 염미봉 : 여성)

■ 서울본부 준비위원회 구성 - 2005년 6월 15일

■ 강원 본부 - 결성 준비 중

“우리대에 우리손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 49 -



우리 민족끼리



3. 대전충남본부 임원 및 집행부

(* 이하 각각 가나다순)

● 고문

강용식(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곽성영(기독교대한감리회남부연회 감독),
김금선(원로), 김병욱(충남대교수), 김순호(신부), 김정현(공주대교수),
김주일(대전상공회의소회장), 김주팔(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장),
민명수(대전참여연대공동의장), 서광덕(원불교청소년수련원장),
설동호(한밭대학교 총장) 송좌빈(원로), 양만규(원로), 유영소(목사),
이명남(목사), 이상덕(전교조대전지부), 이김정순(여성계 원로),
이중주(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장석정(6.15공동선언실천연대 고문),
정순훈(배재대총장), 정효순(범민련남측본부 고문), 진종문((사)촉주관 협회)
조제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 최명식(전국농민회총연맹 전의장),
최병국(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홍성순(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이상 가나다순 26인)

● 감사

여운철(변호사), 최명순(대전여민회감사)

● 상임대표

김용우 (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대전충남통일연대)

● 공동대표

구노회(국회의원), 권선택(국회의원), 김규복(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NCCT),
김영철(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김원웅(국회의원), 김지철(천안본부 상임대표),
박춘희(민주노동당대전시당), 박병석(국회의원), 선병렬(국회의원),
성광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송인준(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용관(범민련대전충남연합), 안은찬(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이상민(국회의원), 이중호(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정천귀(충남대학교민주노동회), 조성호(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조연상(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동수(한국청년회의소대전지부 JCI),
최교진(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50 -



우리 민족끼리



● 대외협력위원회

안은찬(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여인철(민족문제연구소),
최교진(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과거사청산특별위원회

이규봉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강대훈(화동무역 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구자명(천안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동섭(한국청년회의소대전지부),
김양호(민주노동당대전시당), 김한샘(충남대학교민주노동회),
박규용(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오관근(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유병규(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광진(대전경실련),
이영복(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대전충남통일연대),
정완숙(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황병근(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 대전지역본부)

● 사무처장: 박희인

□ 참가단체 현황 □

(사)대전실업구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대전여민회, (사)대전총사단,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촉주관협회, (사)기독교연합봉사회,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대전충남통일연대, 5.18유공자동지회대전충청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전충청지부, 남북공동선언대전충남실천연대,
노무현을사랑하는대전모임, 대전6.15청년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T),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대전민청동우회,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의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대전지역가톨릭청년(준비위원회), 대전참사당일꾼회,

- 51 -



우리 민족끼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마당극단'좋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양심수호위원회,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성공회대전교구, 대한성공회대전교구나눔의집, 대한감리회남부연회자주통일특별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예술단우금지,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민주노동당대전지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민족문학작가회의대전충남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충남지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대전충남연합, 조선일보없는아름다운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침례신학대학민주동문회, 평화일꾼선교회, 한겨레신문대전독자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 한남대학교기독교학생회(SCA),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한국청년회의소대전지부(JCI), 국회의원 구는희, 권선택, 김원웅, 신병렬, 이상민, 박병석 시의원 안중기, 조신희, 한기은(전직)

(이상 64개 단체 및 국회의원 6명 시의원 2인 개별인사 1인, 가나다 순)

● 천안지부 (26개 단체 및 국회의원2인 종교인2인)
금속노조한국교아지회, 국제와이즈벤치안클럽, 민주노동당충남도당천안지역위원회, 소리여울, 신바람, 통일로가는길, 전교조천안초등지회, 전교조천안중등지회, 전국철도노동조합천안역지부, 천안농민회, 천안여성회, 천안지역노조, 충남자치분권연구소, 충남노동자문선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 천안시민포럼, 천안KYC, 천안아산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YMCA, 천안아산통일연대, 천안YWCA, 참여생활정치연대, 천안자활후견기관, 충남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천안분회, 열린우리당천안시당원협의회, 최형목(종교인), 국회의원 박상동, 양승조<무소>(26개 단체 및 국회의원 2명, 종교인 1명)



4. 6.15공동위원회 대전충남본부 주요 행사일정

■ 정전협정체결 52주년 기념 심포지엄

- 주최: 6.15공동위원회 대전충남 본부
- 주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실현을 위한 지역민의 역할**
- 일시 및 장소: 2005년 7월 27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
- 주제발표: **강정구** (동국대사회학과 교수)
- 토 론: **김학성**(충대안보대학원교수), **박성준**(대전KBS아나운서), **최교진**(민화협상임집행위원장), **이충재**(대전YMCA사무총장), **박종철**(대전6.15청년회회장)
- 부대행사 : ■ 사진전(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 8.15 광복 60주년 기념 통일기원 걷기대회

- 주최: 6.15공동위원회 대전충남 본부
- 일시: 2005년 8월 7일 (일) 09:00 ~ 12:30
- 장소: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 ~ 북문 앞 보라매공원
- 주요 프로그램: 1부-기념식, 2부-걷기대회, 3부 - 축하공연 및 폐회



■ 광복 60주년기념 8-15 평화통일 민족대회 (약칭 : 8-15 민족대회)

- 주제: 화해, 평화, 통일(가안)
- 일시: 2005.8.13(토) ~ 8.17(화) /4박 5일
- 장소: 서울
- 참가 규모: 북측 - 대표 200명 및 당국대표 20여명(예상), 해외 - 대표단 300명 내외, 남측 - 대표단 400명 및 참관단 5,000명
- 주요내용:
 - 환영 및 환영 만찬,
 - 개막식 및 전야제(온거레 통일 가요제)
 - 광복 60주년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
 - 평화통일대행진(합회식, 휴전선~서울 평화대행진 등)
 - 부문 단체별 교류 모임
 - (국제) 학술 토론회
 - 예술 공연(남측, 북측) 등



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8-18. 3층
Tel: (042)638-0615 Fax: (042)633-8087
Http://www.lcorea.or.kr E-mail: minjok615@empal.com
후원계좌: 농협 480-12-138883 (박혁인)

